

#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글·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

흔히 의료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 도입, 의료급여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중심의 양적 성장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짧은 기간내에 외국에 비해 낮은 의료비 부담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의료이용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최근 캐나다의 한 조사연구기관이 OECD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우리나라가 5위를 차지하였다. 출생시 기대여명, 영아사망률 등 주요 보건의료지표에서 짧은 기간에 놀라운 성과를 보인 반면, 국민의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비용효과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은 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낮은 의료비, 높은 건강수준 등을 고려할 때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의료서비스산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여러가지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률적인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고급화·다양화된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실정이다. 급성병상·고가의료장비의 공급과잉, 요양병상의 과소공급 등 의료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병원의 수익성은 일반 제조업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이 타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 개발은 미흡한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를 둘러싼 내적·외적 환경을 고려할 때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료비는 GDP대비 6.0%인 약 48조원이다.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소득의 증가 및 고령화 등으로 매년 10%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의료시장의 개방화가 진행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산업을 둘러싼 전세계적 경쟁은 점점 치열해 질 것이며 세계 각국은 의료서비스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대통령 직속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2006년 하반기에 구체적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개선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도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의료법인 합병절차를 신설하여 경영효율성이 낮은 의료기관의 퇴출구조를 제도화하고 양·한방 협진 허용, 병원내 의원개설 등을 허용하여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할 것이다.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합법화하여 해외의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소비자 지향적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의료법에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의료기술이 개발되었을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서비스의 질과 고용수준 등을 반영한 수가체계를 개발해 나갈 것이다.

다양한 의료욕구의 충족 및 첨단의료기술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비급여중심의 민간의료보험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현재 상품개발을 위한 기초통계 공유, 상품 표준화,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비급여부분 가격계약 허용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적절한 역할 설정을 해 나갈 것이다.

의료서비스산업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는 병원이 기술혁신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혁신형 연구중심 병원을 육성하고 있다. 혁신형 연구중심 병원은 병원과 우수인력, 기업, 대학, 연

구소 등이 결합된 형태의 네트워크이며 이는 단순 환자진료중심의 병원을 혁신활동의 장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2개소를 지정하여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내에 우수한 외국의료기관을 유치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언어 등의 제약없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시아지역 해외환자를 적극 유치하여 동북아 중심병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2015년에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선진국 대비 95%수준으로 높아지고 매년 40만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하여 연간 7천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시민단체에서는 의료의 영리화를 이유로, 의료계 일부에서는 기득권의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대책은 의료의 상업화를 부추기거나 특정 이익단체의 이익을 침해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치열한 세계 의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단체의 입장이나 관점이 아닌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정부는 관련단체들과 국민들을 설득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KHA**